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 상관에게 전화를 통하여 모욕하는 경우를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적용에 해당한다.

㉠ 1개 ㉡ 2개 ㉢ 3개 ㉣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 1개 ㉡ 2개 ㉢ 3개 ㉣ 없음

3.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상을 입고, 자상이 급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였는데,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에는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항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甲은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회귀성 정신병 소질을 가진 자인데, 甲은 과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술집 여급 乙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판례는 甲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한다.
- ㉣ 우리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조각 내지 책임감경이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다.

5. 각 사례에서 甲에게 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 甲은 고속도로를 야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기 위해 뛰어난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병원 인턴인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A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전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A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甲은 A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뒤 8m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혔다.
- ㉣ 산부인과 의사 甲은 30대 중반의 초산모 乙에 대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乙은 수술 후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의 증세를 나타내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지만, 甲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은 폐색전증의 증상과 정후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의 하나였다.

6.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가 없기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서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은 모르지만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 정유회사의 경영자가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지와 관련한 간담회 주선을 청탁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그 청탁과 관련하여 위 국회의원 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더라도,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 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7. 다음의 사례 중에서 甲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제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 ㉡ A주식회사 임원인 甲이 회사직원을 해고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 ㉢ 회사간부인 甲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 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하였다.
- ㉣ 근로자 甲등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하였다.

㉠ 1개 ㉡ 2개 ㉢ 3개 ㉣ 4개

8.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음란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후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
- ㉡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 훈련병이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히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집총거부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항명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 다수의 계(契)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9.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乙이 1981년 2월 초순경부터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도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甲이 그 히로뽕 제조행위의 중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가담행위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하여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 ㉡ A, B, C, D 등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에 대한 공동의 사만을 가진 채 상대방인 甲, 乙, 丙, 丁 등과 패싸움을 하던 중 A가 甲을 칼로 찔러 죽게 한 경우에 B, C, D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행행위 도중에 뒤늦게 타인의 범행의사에 가담한 경우에도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 ㉡ 파괴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의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 단위농협의 조합장이 대금 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 취득 등의 조치 없이 변질의 우려가 있는 조합의 양곡을 외상 판매함으로써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1.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유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 ㉡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연소죄, 중체포·중감금죄가 있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등이 있다.
- ㉢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12.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통설에 의함)

-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 친족상도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 ㉢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 상습도박죄에서의 '상습성',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 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험요소 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다음 중 자수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다.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모두 바르게 표시한 것은?

-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뇌물수수사실을 축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범경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자수에 해당한다.
-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① ㉠-(O), ㉡-(X), ㉢-(X), ㉣-(O), ㉤-(X)
 ② ㉠-(X), ㉡-(O), ㉢-(X), ㉣-(X), ㉤-(O)
 ③ ㉠-(O), ㉡-(O), ㉢-(X), ㉣-(O), ㉤-(X)
 ④ ㉠-(O), ㉡-(X), ㉢-(O), ㉣-(X), ㉤-(O)

14. 물수와 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 철폐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 등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압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죄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폭행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존속에 대하여 가중 처벌한다.
- ㉡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 처벌한다.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 ㉤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6.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 ㉡ "앞으로 일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의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소지 중이던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피해자와 연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당시의 주위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그 자녀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의 인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교양권의 행사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친권자는 협박죄로 처벌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취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 ㉡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 ㉢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18. 형법상 착오문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 착오문제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
- ㉡ 甲은 乙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포장마차로 달려가 길이 30센티미터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乙에게 휘두르다가 이를 멀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丙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원상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자기의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고도 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는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를 환각범이라 한다.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종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종양수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형법상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③ 인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 ④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개를 건물에 투척하여 건물벽이 더럽혀진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는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정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법한 정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 피해자 소유의 축사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종종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종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무는 이 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 의료인이나 의료병원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 회사를 양도한 자가 회사채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②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23. 간첩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기밀은 군사비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 등에 대한 기밀도 포함되므로 수배자명단도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대법원은 국가기밀과 관련해 국내에서 공지에 속하거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③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보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 ④ 지형에 의하여 해외교포 사회의 민심동향을 파악·수집하는 것은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②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위탁에 의한 신임관계를 깨뜨리는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일시 사용이나 손괴 또는 은닉의사로 자기 점유물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 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항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5.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불법체포죄 | ㉡ 특수도주죄 | ㉢ 강제집행면탈죄 |
| ㉣ 공무원 보관물무효죄 | ㉤ 사문서 부정행사죄 | |
| ㉥ 장물취득죄 | ㉦ 공무집행방해죄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취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②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③ 가옥을 소취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27.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일본국의 500엔짜리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무게를 약간 줄였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스위스 화폐로써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한다.
- ③ 진정한 통화라고 하여 위조통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경우,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8.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거나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와 증권의 유통성을 필요로 한다.
- ④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 발행의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29. 문서위조죄의 죄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이 소유한 자기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한 때에는 타인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다.
- ② 문서를 위조한 범인이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③ 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④ 결재된 원안문서에 새로운 사항을 첨가하여 기재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30. 내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범이다.
- ㉣ 내란폭동에 참가한 다수인들 중 어느 일방이 폭동을 적극적으로 교시한 경우에는 내란죄 이외에 내란교사의 책임도 진다.
- ㉤ 내란행위에 가담한 참가자의 지위 및 기여정도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다음 중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중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 ㉡ 허위의 유언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가 속한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을 받은 경우
-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 원래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 ㉥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 허위채권으로 분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실제적 경합범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A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들을 지휘하여 재소자의 호송제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범죄의 성질상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 ㉣ 경찰관 甲이 간통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간통을 부인하는 피의자 乙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인 丙이 제출한 간통장면을 촬영한 CD를 乙에게 보여 준 경우 공무원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혼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③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 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 ④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35. 다음 중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중·개축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게 한 경우
-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 ㉢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재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진화통화를 한 경우
- ㉣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뇌물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①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 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받은 경우
- ② 경찰관이 개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개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 ③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④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37. 공무원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개인택시 운전사업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집회 시위과정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 그것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공무원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38. 범인은닉죄(또는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라도 범인은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公示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39.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원고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 시정한 경우,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적법하다.
-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증인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한 경우에도 종전 증인절차에서의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최초 한 전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 3번,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1번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40.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 甲이 변호사인 乙로 하여금 정제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확정적 고의를 요한다.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원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고소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